

공주민제(DCA) 관점에서 본 6 인의 미래경제 구상과 한계

켈소 · 샌더스 · 올트만 · 양 · 머스크 · 하서비스
— ‘세금-복지’가 아니라 ‘지분-의결-책임’으로 설계하는 노동 이후
의 사회

이○연
2025.12.27 · 초안 v1.0

발행 정보

저자: 이○연

발행일: 2025.12.27

버전: 초안 v1.0

용도: 연구·토론용 원고(출판 편집 전).

권장 인용문: 이○연. (2025). 『공주민제(DCA) 관점에서 본 6 인의 미래경제 구상과 한계』(초안 v1.0).

키워드: 공주민제, DCA, 자본접근권, 분산 소유, 분산 의결, ESOP, 기본소득, 포획

Disclaimer: 본 문서는 의견서/연구 원고이며, 특정 인물·기업·단체에 대한 법률·재무 자문을 구성하지 않는다.

목차

- 요약: 6 인의 구상과 공주민제의 응답
- 1. 문제설정: 노동 이후, 자본접근권 0, 포획
- 2. 평가기준: DCA 렌즈(C1~C7)
- 3. 6 인의 사상과 한계
- 4. 공주민제의 설계: 분산 소유·의결·책임
- 5.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 6. 정책 패키지 체크리스트 및 로드맵
- Executive Brief (English)
- 부록 A. 용어(요약)
- 부록 B. 참고문헌 및 자료

요약: 6 인의 구상과 공주민제의 응답

이 소책자는 6 인의 대표적 담론(자본대중화, 민주사회주의적 기업개혁, 기술-기본소득, 기술-가속주의, 책임 있는 AGI)을 공주민제(DCA: Distributed Citizen Assets) 관점에서 비교-평가하고, 공주민제가 그들의 '핵심 한계'를 어떻게 설계로 해결하려 하는지 정리한다.

평가의 관점은 단순한 찬반이 아니라 '노동이 더 이상 사회통합의 중심 장치가 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자본접근권(=자본을 소유할 기회와 경로) 0 상태를 제거하고, 소유·의결·책임을 분산시키며, 포획(capture)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제도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본 문서는 출판용 편집을 염두에 둔 원고 형태이며, 인용·사실관계·표현은 추가 교정과 보강이 필요하다.

핵심 결론

켈소는 '자본소득의 대중화'라는 문제의식을 제도 도구(ESOP)로 구현했다 [R1][R18][R19]. 샌더스는 '기업 민주주의'로 의결권 문제를 전면화했다 [R14][R15]. 올트만·양은 AI 충격을 '현금 바닥(UBI)'으로 완화하려 했다 [R7][R5][R6]. 마스크는 노동소멸의 속도와 규모를 대중적으로 각인시키며 UBI/UHI를 언급했다 [R2][R3][R4]. 하사비스는 '책임 있는 AGI'의 규범과 안전 담론을 강화했다 [R10][R11].

그러나 이들 접근은 공통적으로 '보편 소유+보편 의결+보편 책임'의 통합 설계가 약하다. 공주민제(DCA)는 이를 '시민 기본계정'과 '분산 의결(프록시)' 및 '포획 방지·리스크 완충'으로 묶어, 노동 이후의 유효수요와 정치적 안정, 인간의 발언권을 동시에 설계한다 [R20][R21].

한 장 요약 매트릭스(초안)

인물	핵심 기여	DCA 관점 핵심 한계	DCA 설계 해법 (요약)
루이스 켈소	핵심 주장 / 핵심 처방	근로자-기업 중심: ESOP는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작동한다. 노동이 감소하는 국면에서는 적용 범위가 구조적으로 축소된다. · 의결권/거버넌스의 제약: ESOP는 '자산 형성'에는 기여하지만, 기업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민주화 되는지(이사회, 의결권 구조)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	공주민제는 '직장 기반 소유'가 아니라 '시민 기반 소유'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 ESOP 도구는 유지하되, 시민 전체에 대한 자본 접근권 0 제거(시민 자본의 정, 공적 자본의 시민 환류, 분산 투자)를 상위 구조로 설계한다.
버니 샌더스	핵심 주장 / 핵심 처방	노동자 범위의 한계: 고용 기반 제도이므로 비정규·플랫폼·사업 상태의 시민을 포괄하기 어렵다.	공주민제는 샌더스의 '의결권 민주화' 문제의식을 계승하되, 단위를 노동자에서 시민으로

		렵다. · 대립적 정치경제: 강제 이전으로 인식 되면 반발이 커 지고, 기업이 고 용을 외주화하 거나 계약직으 로 전환해 회피 할 유인이 생긴 다(정책 내재적 회피 리스크).	확장한다. · 기 업 단위의 강제 이전 대신, 공적 자본과 세제·규 제의 '자동 배 분'으로 시민 계 정을 축적시키 고, 그 지분이 기업 지배구조 에 반영되도록 의결권 신탁/대 리 체계를 설계 한다.
샘 올트만	핵심 주장 / 실천	현금은 '소유'가 아니다: UBI는 소비를 지지하 지만, 자본소득 (배당·이자·자본 이득)의 생성 구 조와 의결권 구 조를 바꾸지 못 한다. · 정치 의 존성: UBI는 조 세·이전의 정치 적 합의가 필요 해, 정권 교체나 재정 긴축 국면 에서 쉽게 후퇴 할 수 있다.	공주민제는 '현 금 이전'보다 '사 전 분배(pre- distribution)' 를 중시한다. 즉, AI 생산수단 의 소유권을 시 민 계정으로 먼 저 분산시켜 배 당이 자동 발생 하게 만든다. · 디지털 ID/거버 너스는 민간 독 점이 아니라 공 공-시민-민간이 분권적으로 운 영하는 표준(공

개 규격, 감사를
내장)으로 설계
한다.

앤드류 양	핵심 주장 / 핵심 처방	소비 기반 분배의 한계: VAT-현금은 소비를 지지하지만, 생산수단 소유·자체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 · 인플레이션·가격 전가 논쟁: VAT 와 현금 이전이 가격에 전가될 경우, 실질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정책 설계에 따라 달라지나 논쟁이 지속).	공주민제는 VAT 같은 조세를 '소비 보전'에 만 쓰지 않고, 일정 비율을 시민 자본계정에 자동 적립해 '배당 기반 소득'으로 전환하는 설계를 포함한다. · 현금 바닥은 전환기 안전망으로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시민의 자본소득이 주된 기반이 되도록 설계 한다.
-------	---------------	---	---

일론 머스크	핵심 주장 / 담론의 힘	전환기 제도 공백: '필요하다'는 진단은 강하지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소유하고 어떤 절차로 분배·의결·감독할지 설계	공주민제는 머스크가 강조한 '전환기 공백'을 제도 설계로 메운다: 기술-자본의 소유권을 시민 계정으로 분산시키고, 의결
--------	---------------	---	--

		가 부재하다. · 소유의 재집중 을 방치: 현실의 머스크식 기업 가-주주 모델은 오히려 자본 집 중을 강화할 가 능성이 크다.	권과 책임을 함 께 분산한다. · 특정 기업가·플 랫폼에 대한 의 존을 줄이기 위 해, 공적 자본과 시민 자본계정 의 '상호 견제'를 설계한다.
데미스 하사비 스	핵심 주장 / 조 직적 실천	사기업 중심 거 버넌스: '책 임'이 기업 내부 위원회와 자율 규범에 기대는 순간, 외부 민주 적 통제는 제한 된다. · 가치의 귀속 문제: AI 가 창출하는 경 제적 잉여가 주 주·플랫폼에 집 중될 수 있으며, 공익 담론과 분 배 현실의 괴리 가 생긴다.	공주민제는 '책 임'의 담론을 '소 유와 의결의 구 조'로 연결한다: 공익을 말하는 조직의 성과가 시민 자본계정 에 환류되는 구 조가 있을 때 책 임은 지속 가능 해진다. · 기업 내부 자율규범 을 넘어, 시민- 국가-민간의 다 층 감시(감사, 공개지표, 독립 평가)를 제도화 한다.

1. 문제설정: 노동 이후, 자본접근권 0, 포획

AI·로봇·플랫폼화는 생산을 늘릴 수 있지만, 소유 구조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소득과 권력이 더 빠르게 집중될 수 있다.

공주민제는 다음 전제를 둔다.

- 노동소득 중심 분배는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 자본소득이 늘어도 '자본접근권 0'인 다수가 그대로 남으면, 분배와 민주주의가 동시에 불안정해진다.
- 기술 발전의 혜택은 '소유와 의결' 구조로 귀속된다. 따라서 소유·의결을 설계하지 않으면 윤리·복지 논쟁은 제자리걸음을 한다.
- 정책은 종종 포획된다. 따라서 '좋은 의도'가 아니라 '나쁜 유인에도 견디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2. 평가기준: DCA 렌즈(C1~C7)

본 소책자는 다음 기준으로 6 인의 구상을 평가한다.

C1. 자본접근권 0 해소 — 시민 대다수가 '자본을 살 기회' 자체가 없는 상태(신용·계정·규모·리스크 분담 부재)를 제도적으로 제거하는가.

C2. 소유의 분산 — 소유가 특정 계층·세대·지역으로 재집중되지 않도록 자동 안정장치(누진, 상한, 자동 배분, 상속/이전 규칙)를 갖는가.

C3. 의결의 분산 — 지분만 분산되고 의결이 집중되는 '명목 소유' 문제를 해결하는가(의결권 신탁, 대리투표, 이중 의결 제한 등).

C4. 책임의 분산 — 리스크와 부채가 약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하는가(레버리지 규제, 손실흡수, 안정장치, 감독).

C5. 포획 방지 — 정치·관료·기업·플랫폼에 의한 제도 포획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가(투명성, 감사, 분권, 공개 API, 시민감사).

C6. 노동 이후의 유효수요 — 임금이 감소해도 소비·투자·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소득의 근원'을 설계하는가.

C7. 국제확장성 — 국가 단위에서 시작하되, 글로벌 자본·플랫폼 환경에서도 실현 가능한가.

3. 6 인의 사상과 한계

루이스 켈소 (Louis O. Kelso)

'자본 소득의 대중화'를 제도로 구(ESOP)로 설계한 선구

3.1 핵심 주장과 공헌

- 핵심 주장: 생산은 노동과 자본 두 요소가 함께 만든다. 기술 진보로 자본의 기여가 커질수록, 자본 소유의 확대 없이는 분배 정의가 봉괴한다(이른바 '이중요소/바이너리 경제학').
- 핵심 처방: 차입(leveraged)과 세제·신탁 구조를 이용해 노동자가 기업 지분을 취득하게 하는 ESOP를 제도화했다. (1956년 Peninsula Newspapers 사례, 1974년 ERISA 체계 내 ESOP 정착)
- 공헌: '노동=유일한 참여'라는 통념을 깨고, '소유(자본) 참여'를 정책 언어로 만들었다.

3.2 공주민제 관점의 한계

- 근로자-기업 중심: ESOP는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작동한다. 노동이 감소하는 국면에서는 적용 범위가 구조적으로 축소된다.
- 의결권/거버넌스의 제약: ESOP는 '자산 형성'에는 기여하지만, 기업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민주화되는지(이사회, 의결권 구조)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
- 리스크 편중: 한 기업의 지분에 근로자 자산이 과집중될 수 있고, 경기·산업 충격이 생계와 자산을 동시에 타격한다.
- 세제 기반 확산의 한계: 세제 인센티브와 금융 접근성이 핵심이어서, 금융·정치 환경이 불리하면 확대가 정체된다.

3.3 공주민제의 설계적 응답

- 공주민제는 '직장 기반 소유'가 아니라 '시민 기반 소유'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 ESOP 도구는 유지하되, 시민 전체에 대한 자본접근권 0 제거(시민 자본계정, 공적 자본의 시민 환류, 분산투자)를 상위 구조로 설계한다.
- 기업 단위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시민 단위 인덱스(분산)’ + ‘민간(직장/조합) 단위 집중’을 혼합하는 2 층 구조를 제안한다.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

‘기업 민주주의’로 불평등을 교정하려는 민주사회주의적 기업개혁

3.1 핵심 주장과 공헌

- 핵심 주장: 불평등의 뿌리는 기업 권력과 부의 집중이다. 정치 민주주의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직장 내부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 핵심 처방: ‘Democratic Employee Ownership Funds(노동자 소유 펀드)’를 통해 기업 지분을 단계적으로 노동자 집단에 이전(최대 20%)하고, 노동자 이사회 참여·선거를 강화한다.
- 공헌: ‘의결권’과 ‘기업 지배구조’를 분배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3.2 공주민제 관점의 한계

- 노동자 범위의 한계: 고용 기반 제도이므로 비정규·플랫폼·실업 상태의 시민을 포괄하기 어렵다.
- 대립적 정치경제: 강제 이전으로 인식되면 반발이 커지고, 기업이 고용을 외주화하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해 회피할 유인이 생긴다(정책 내재적 회피 리스크).
- 국가 자본-시민 자본 연결 부족: 공적 자본(연기금, 국부펀드 등)을 시민 개인의 자본계정으로 환류시키는 설계가 명시적으로 약하다.
- 글로벌 자본 환경: 다국적 기업, 해외 상장, 조세 회피 구조에서 국내 노동자 중심 설계만으로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3.3 공주민제의 설계적 응답

- 공주민제는 샌더스의 ‘의결권 민주화’ 문제의식을 계승하되, 단위를 노동자에서 시민으로 확장한다.

- 기업 단위의 강제 이전 대신, 공적 자본과 세제·규제의 ‘자동 배분’으로 시민 계정을 축적시키고, 그 지분이 기업 지배구조에 반영되도록 의결권 신탁/대리 체계를 설계한다.
- 회피(외주화)를 막기 위해 고용형태가 아니라 ‘매출·자본·플랫폼 지배력’ 등 경제적 실체를 과세·규제 기준으로 삼는 설계를 병행한다.

샘 올트만 (Sam Altman)

AI 혁신을 전제로 한 ‘기술·재분배’(UBI/현금 이전) 구상

3.1 핵심 주장과 공헌

- 핵심 주장: AI는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올리지만, 소유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려면 기본소득 등 재분배 장치가 필요하다.
- 실천: 보장소득 실험(OpenResearch) 지원, 그리고 ‘인간 증명’(World ID 등) 같은 디지털 인프라에 관심을 보여 왔다.
- 공헌: 테크 엘리트 내부에서 불평등과 재분배를 공개 의제로 올렸다.

3.2 공주민제 관점의 한계

- 현금은 ‘소유’가 아니다: UBI는 소비를 지지하지만, 자본소득(배당·이자·자본이득)의 생성 구조와 의결권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
- 정치 의존성: UBI는 조세·이전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해, 정권 교체나 재정 긴축 국면에서 쉽게 후퇴할 수 있다.
- 디지털 인프라의 사유화 위험: ‘인간 증명/ID’가 민간 플랫폼에 종속되면, 분배 인프라 자체가 새로운 포획 지점이 된다.
- 글로벌 문제의 국내적 해법: AI 가치사슬은 글로벌인데, 분배는 국가 재정에 묶이면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3.3 공주민제의 설계적 응답

- 공주민제는 '현금 이전'보다 '사전 분배(pre-distribution)'를 중시한다. 즉, AI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시민 계정으로 먼저 분산시켜 배당이 자동 발생하게 만든다.
- 디지털 ID/거버넌스는 민간 독점이 아니라 공공-시민-민간이 분권적으로 운영하는 표준(공개 규격, 감사를 내장)으로 설계한다.
- 국가별로 출발하되, 글로벌 인덱스 자산 및 국제 협약을 통해 '자본소득의 국제적 공유'로 확장 가능한 경로를 제시한다.

앤드류 양 (Andrew Yang)

자동화 충격에 대비한 보편적 현금 바닥(UBI)과 소비세(VAT)

3.1 핵심 주장과 공헌

- 핵심 주장: 자동화가 일자리를 잠식하는 속도가 사회 적응 속도를 앞지른다. 최소한의 안정적 현금 바닥(월 1,000 달러 등)이 필요하다.
- 핵심 처방: 'Freedom Dividend(보편 기본소득)' + VAT(부가가치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일부 복지와 선택적으로 통합한다.
- 공헌: 대중 담론에서 AI-실업-기본소득 연결을 구체적 정책 패키지로 제시했다.

3.2 공주민제 관점의 한계

- 소비 기반 분배의 한계: VAT-현금은 소비를 지지하지만, 생산수단 소유·지배구조를 바꾸지 못한다.
- 인플레이션·가격전가 논쟁: VAT 와 현금 이전이 가격에 전가될 경우, 실질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정책 설계에 따라 달라지나 논쟁이 지속).
- 정치·재정 지속성: 경기 침체나 재정 압박 때 '현금'은 표적이 되기 쉽다.
- 자본시장 편입의 부재: 시민이 자본소득을 갖도록 만드는 '계정-자산-배당' 구조가 약하다.

3.3 공주민제의 설계적 응답

- 공주민제는 VAT 같은 조세를 '소비 보전'에만 쓰지 않고, 일정 비율을 시민 자본계정에 자동 적립해 '배당 기반 소득'으로 전환하는 설계를 포함한다.
- 현금 바닥은 전환기 안전망으로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시민의 자본 소득이 주된 기반이 되도록 설계한다.
- 가격전가 위험은 분산투자 배당과 결합해 완화한다(소비자=주주가 되면 가격 상승의 일부가 배당으로 환류).

일론 머스크 (Elon Musk)

AI-로봇이 만드는 '풍요/일자리 소멸'을 강조하되 제도 설계는 미흡

3.1 핵심 주장과 공헌

- 핵심 주장: AI와 로봇이 대부분의 일을 더 잘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본소득 또는 '보편 고소득'이 필요해질 수 있다.
- 담론의 힘: '노동의 소멸' 전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속도와 규모의 충격을 강조한다.
- 공헌: 문제의식(일자리의 종언)을 대중과 정책권에 강하게 주입했다.

3.2 공주민제 관점의 한계

- 전환기 제도 공백: '필요하다'는 진단은 강하지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소유하고 어떤 절차로 분배·의결·감독할지 설계가 부재하다.
- 소유의 재집중을 방지: 현실의 머스크식 기업가-주주 모델은 오히려 자본 집중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 '의미' 문제의 방기: 일자리 상실 이후 인간의 의미·권리·정치적 발언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제도 설계가 약하다.
- 기술과 권력의 결합 위험: 플랫폼/로봇/데이터 인프라를 가진 소수가 국가 기능을 대체하거나 포획할 위험이 있다.

3.3 공주민제의 설계적 응답

- 공주민제는 머스크가 강조한 '전환기 공백'을 제도 설계로 메운다: 기술·자본의 소유권을 시민 계정으로 분산시키고, 의결권과 책임을 함께 분산한다.
- 특정 기업가·플랫폼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공적 자본과 시민 자본계정의 '상호 견제'를 설계한다.
- '의미' 문제는 배당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시민의 참여(의결, 감시, 지역 프로젝트 투자) 구조를 함께 포함한다.

데미스 하사비스 (Demis Hassabis)

'책임 있는 AGI'와 과학적 진보를 결합한 기술·윤리적 테크노크라시

3.1 핵심 주장과 공헌

- 핵심 주장: AGI는 거대한 혜택과 리스크를 동시에 갖는다. 안전·윤리 책임을 내장한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 조직적 실천: 대형 연구조직의 거버넌스(안전위원회, 원칙, 심의 구조)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과학·의료·기후 등 '공익적 응용'을 강조 한다.
- 공헌: '안전/책임' 담론을 기술개발 내부 규범으로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3.2 공주민제 관점의 한계

- 사기업 중심 거버넌스: '책임'이 기업 내부 위원회와 자율 규범에 기대는 순간, 외부 민주적 통제는 제한된다.
- 가치의 귀속 문제: AI가 창출하는 경제적 잉여가 주주·플랫폼에 집중될 수 있으며, 공익 담론과 분배 현실의 괴리가 생긴다.
- 국가-군사 연계 리스크: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될수록 '책임 있는 AI'가 국가안보 논리로 흡수될 수 있다.
- 투명성의 한계: 안전을 이유로 한 비공개가 반복되면, 사회적 신뢰 기반이 약화된다.

3.3 공주민제의 설계적 응답

- 공주민제는 '책임'의 담론을 '소유와 의결의 구조'로 연결한다: 공익을 말하는 조직의 성과가 시민 자본계정에 환류되는 구조가 있을 때 책임은 지속 가능해진다.
- 기업 내부 자율규범을 넘어, 시민-국가-민간의 다층 감시(감사, 공개 지표, 독립평가)를 제도화한다.
- AGI의 공익성과 국제협력은 '보편 소유'의 기반 위에서만 안정적으로 구현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4. 공주민제의 설계: 분산 소유·의결·책임

공주민제(共株民制)-DCA(Distributed Citizen Assets)의 핵심은 '세금-복지의 사후 분배'가 아니라 '소유-의결-책임의 사전 분배'이다.

노동소득이 사회 통합의 중심이던 시대에는, 임금과 조세가 분배의 주 흐름였다. 그러나 AI·로봇·플랫폼화로 노동이 구조적으로 축소되는 국면에서는, 임금-조세 회로만으로는 유효수요와 정치적 안정, 그리고 인간의 의미를 지탱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주민제는 다음 3 가지를 한 세트로 설계한다.

- 1) 분산 소유: 시민 각자가 "자본계정"을 통해 사회 전체의 자본(기업/국가/공공자산)에 자동으로 지분을 가진다.
- 2) 분산 의결: 시민의 지분이 실제 의결권으로 연결되도록 대리(프록시)-신탁·투표 시스템을 설계한다.
- 3) 분산 책임: 레버리지, 손실, 정보 비대칭이 약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감독·투명성·위험완충을 제도화한다.

요지는 '기회자본의 사회화(자본접근권 0 제거)'이며, 이는 물수가 아니라 배분 규칙의 재설계다 [R20].

4.1 제도 아키텍처(요약)

A. 시민 자본계정 (Citizen Asset Account)

모든 시민에게 1인 1계정의 '자본계정'을 부여하고, 공적·사회적 자금의 일부가 이 계정에 자동 적립되도록 한다. 계정은 분산투자(인덱스)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B. 공적 자본의 시민 환류

국부펀드·연기금·공공기금의 수익 중 일정 비율을 '시민 계정'에 귀속시키는 규칙을 만든다. 복지의 일부를 '배당'으로 전환하는 통로다.

C. 민간 영역의 연계(ESOP/노조/조합)

직장·조합 단위의 주식축적(켈소의 ESOP, 노동조합의 장기 매수 등)을 시민 계정의 상위 구조와 연결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분산 지분을 강화한다.

D. 분산 의결 메커니즘

직접투표만이 아니라, 시민이 신뢰하는 대리인(전문가/단체/지역)을 선택해 의결권을 위임·철회할 수 있는 '유동적 대리(프록시) 민주주의'를 결합한다.

E. 포획 방지와 책임 구조

공개지표, 독립감사, 이해상충 규정, 상한/누진 규칙, 리스크 완충(보험·기금)을 통해 제도 포획과 도덕적 해이를 억제한다.

4.2 왜 '배당(자본소득)'이 핵심인가

- 현금 이전은 정치에 취약하지만, 배당은 '소유권'에서 자동 발생한다.
- 배당은 유효수요를 지탱하면서도 생산성 향상과 연결될 수 있다.
- 소비자=주주가 되면 가격·이윤·분배 갈등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경쟁정책과 독점 규제 병행 필요).
- 배당만으로는 '의미'와 '발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주민제는 분산 의결과 시민감사를 결합한다.

5.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5.1 실현 가능성(정치·재정·법·기술)

정치적 실현 가능성

'세금 증세 vs 복지 확대'의 이념 대립 대신, '국민도 주주가 되는 구조'라는 넓은 연합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노동자(안정), 중산층(자산형성), 자영업·중소기업(수요 안정), 국가(재정 안정성) 모두가 일부 이익을 가진다.

재정·금융 가능성

기존의 공적 자산(연기금/기금), 자본시장(인덱스), 조세(부가가치·디지털·자본이득 일부) 등을 조합하면 '초거대 증세' 없이도 초기 축적이 가능하다. 핵심은 '수익의 귀속 규칙'을 바꾸는 것이다.

법·제도 가능성

사유재산을 몰수하지 않고, 공적 자금의 운용 및 배분 규칙을 변경해 시민 귀속을 확대하는 방식은 헌법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다. 다만 의결권 신탁·대리 체계는 공정성·투명성 요건을 엄격히 설계해야 한다.

기술적 가능성

계정·배당·투표는 디지털 인프라로 구현 가능하다. 그러나 기술은 수단이며, '공공 표준·감사·프라이버시'가 선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포획을 강화할 수 있다.

국제 환경

단일국가 실험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인덱스 자산, 조세 협력, 디지털 신원 표준 등 국제 연계가 필요하다.

5.2 타당성(규범적 정당성)

- 자유의 확장: 소유는 선택과 자율의 물질적 기반이다. ‘노동을 통해서 만’ 자유를 얻는 구조가 약화될 때, 소유 접근권을 보편화해야 한다.
- 민주주의의 보강: 자본 집중은 정치 포획으로 이어진다. 분산 소유·의 결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경제 영역으로 확장한다.
- 효율성: 보편적 자본계정은 장기 자본을 공급하고, 혁신의 수혜가 사회에 환류되도록 한다.
- 안정성: 유효수요 불괴·불평등·포퓰리즘의 악순환을 완화해 시스템 리스크를 줄인다.

5.3 반론과 위험(요약)

- ‘국가가 주주가 되면 사회주의 아닌가’라는 반론: 공주민제는 몰수가 아니라 공적 자본의 수익 귀속 규칙과 시민 계정을 통한 분산 소유를 강조한다 [R20][R22].
- ‘의결권이 포퓰리즘에 휘둘린다’는 반론: 프록시(위임·철회), 전문성 기반 대리, 독립감사, 이해상충 방지로 완충해야 한다.
- ‘재집중’ 위험: 상속·양도·대형 자본의 우회 지배를 막는 상한·누진·투명성 규칙이 필수다.
- ‘기술 인프라 포획’ 위험: 디지털 계정·ID·투표 시스템은 공개 표준과 감사를 내장해야 한다.

6. 정책 패키지 체크리스트 및 로드맵

6.1 정책 패키지 체크리스트

- 시민 자본계정 법제화(대상, 권리, 상속·양도 규칙, 개인정보/프라이버시)
- 공적 자본의 시민 귀속 규칙(국부펀드·연기금·공공기금 수익 배분) [R22].
- 분산투자 원칙과 리스크 규정(인덱스 기본, 집중 제한, 손실흡수 장치)
- 분산 의결 인프라(프록시 위임/철회, 투명한 투표 기록, 이해상충 공개)
- 포획 방지 장치(독립감사, 공개지표, 시민감사단, 로비·회전문 규제)
- 시장 경쟁정책(독점·플랫폼 지배력 규제와 병행)
- 전환기 안전망(단기 현금 바닥 + 직업전환·교육)과의 정합성

6.2 단계별 로드맵

0 단계: 개념-언어의 정착

공주민제의 핵심(자본접근권 0 제거, 분산 소유·의결·책임)을 정책 언어로 정리하고, 공적 자본의 시민 환류 원칙을 사회적 합의 의제로 올린다.

1 단계: ‘시민 계정’의 법제화 및 파일럿

출생/성인 전환 시점에 계정 부여, 공적 기금 수익의 일부 자동 적립, 소액 배당 지급 등 최소 기능을 시범 도입한다.

2 단계: 공적 자본 운용규칙 개편

국부펀드·연기금·국민성장펀드 등 공적 자본의 목적함수에 ‘시민 귀속’

항목을 포함하고, 투명한 성과지표와 독립감사를 도입한다.

3 단계: 민간-공적 연계 강화

ESOP/노조 장기 매수, 지역 시민펀드, 플랫폼 수익 공유 등을 시민 계정과 연결해 자본소득 기반을 확대한다.

4 단계: 분산 의결의 정교화

프록시 민주주의(위임·철회), 공론장, 이해상충 방지 체계, 시민감사 제도를 결합해 '지분=권력' 구조를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5 단계: 국제 협력

국제 인덱스·데이터/AI 가치에 대한 국제적 공유 규칙을 모색한다(협약, 공동펀드, 상호인정 표준).

6.3 국제 비교: 국부펀드/배당의 힌트

공주민제는 기존 제도를 '해체'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공적 자본을 시민 귀속으로 재설계하는 경로를 중시한다.

-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전 세계 상장기업의 평균 약 1.5%를 보유하는 대형 분산 투자자다 [R12][R13]. 다만 귀속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 알래스카 영구기금은 자원 수익을 장기 투자해 배당(PFD)을 지급하는 대표 사례다 [R16][R17]. 배당은 가능하나, 기업 의결권의 민주화 까지 연결되지는 않는다.

Executive Brief (English)

Executive Brief (English)

Title: Distributed Citizen Assets (DCA) as an Ownership-First Social Contract for the Post-Labor Economy

Problem

Automation and AI compress labor demand while amplifying returns to capital and platforms. If income distribution relies mainly on wages plus politically fragile tax-transfer schemes, societies face (i) collapsing effective demand, (ii) escalating wealth-and-power concentration, and (iii) institutional capture by dominant asset owners.

Core Idea

DCA reframes “socialization” as the socialization of opportunity to own capital—not expropriation. It is a pre-distribution system that institutionalizes:

- 1) Distributed ownership: every citizen has a capital account that automatically accumulates diversified equity claims on national and corporate assets.
- 2) Distributed voting: ownership is linked to real governance via proxy/mandate mechanisms, preventing “nominal ownership with concentrated control.”
- 3) Distributed responsibility: leverage, losses, and information asymmetry are constrained so risks are not dumped onto weaker citizens.

Why DCA differs from six common approaches

- Kelso (ESOP/binary economics): powerful tools, but employment-

based and firm-concentrated; DCA makes ownership citizenship-based and diversified.

- Sanders (workplace democracy): strengthens worker voice, but leaves non-workers and global value chains under-addressed; DCA universalizes ownership beyond employment status.
- Altman/Yang (UBI/cash transfers): stabilizes consumption, but does not change who owns and governs productive assets; DCA creates automatic dividend income tied to ownership.
- Musk (abundance narratives): strong diagnosis, weak transition governance; DCA fills the institutional vacuum with rules, oversight, and anti-capture design.
- Hassabis (responsible AGI): ethics without democratic ownership can still concentrate value; DCA aligns “benefit to humanity” with asset-flow rules and civic oversight.

Implementation (high-level)

Phase 1: Legalize citizen capital accounts; route a defined share of public fund returns (sovereign funds, pension funds, public endowments) into accounts.

Phase 2: Build transparent governance: independent audits, public metrics, conflict-of-interest rules, and proxy-voting infrastructure.

Phase 3: Link private sector mechanisms (ESOPs, cooperatives, citizen funds) to the citizen account layer.

Phase 4: Expand internationally via index exposure and interoperable digital identity standards governed by public law.

Feasibility

DCA can start without confiscation. It primarily changes the rules of allocation and beneficiary rights for public capital returns and

selected tax streams (e.g., VAT/digital rents) to seed citizen accounts. The political coalition is broader than “tax-and-spend,” because citizens experience tangible capital ownership and dividend flows.

Claim

In a post-labor transition, durable stability requires an ownership-first settlement. DCA provides a concrete, institutionally implementable blueprint for distributing not only income, but also control and responsibility.

부록 A. 용어(요약)

- 공주민제(共株民制): 시민이 '주식(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 소유가 의결과 책임으로 연결되는 사회 운영 원리.
- DCA (Distributed Citizen Assets): 시민에게 분산된 자산(지분) 구조를 통해 소득·권력·책임을 분산시키는 설계 개념.
- 자본접근권 0: 자본을 소유할 기회·경로·신용이 구조적으로 차단된 상태.
- 사전 분배(Pre-distribution): 사후 조세-복지 이전 이전에, 소유권/시장 규칙 자체를 바꿔 분배 결과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접근.
- 포획(Capture): 정책·감독·제도가 특정 이해집단(기업/관료/정당/플랫폼)에 의해 장기적으로 좌우되는 현상.
- 프록시 민주주의(유동적 대리): 시민이 직접투표 대신 신뢰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방식.

부록 B. 참고문헌 및 자료

웹 자료의 접속일: 2025.12.27

[R1] Kelso Institute, “Binary Economic Modes for the Privatization of Public Assets”.

<https://kelsoinstitute.org/louiskelso/publications/papers/binary-economic-modes-for-the-privatization-of-public-assets/>

[R2] World Government Summit Observer, “Elon Musk on why the world needs a universal basic income” (2017).

<https://www.worldgovernmentssummit.org/observer/articles/detail/elon-musk-on-why-the-world-needs-a-universal-basic-income>

[R3] Fortune, “Elon Musk says AI will remove need for jobs, create ‘universal high income’” (2023-11-06).

<https://fortune.com/2023/11/06/elon-musk-ai-artificial-intelligence-universal-income-jobs/>

[R4] Business Insider, “Elon Musk says AI and robotics will make money ‘irrelevant’” (2025-11).

<https://www.businessinsider.com/elon-musk-robotics-money-irrelevant-currency-universal-basic-income-2025-11>

[R5] Yang2020, “The Freedom Dividend”.

<https://2020.yang2020.com/policies/the-freedom-dividend/>

[R6] Yang2020, “Value-Added Tax”.

<https://2020.yang2020.com/policies/value-added-tax/>

[R7] TIME, “Read TIME’s Interview With OpenAI CEO Sam Altman” (2023). <https://time.com/6288584/openai-sam-altman-full-interview/>

[R8] Reuters, “Sam Altman's rebranded Worldcoin ramps up iris-scanning crypto project” (2024-10-17).

<https://www.reuters.com/technology/artificial-intelligence/sam-altmans-rebranded-worldcoin-ramps-up-iris-scanning-crypto-project-2024-10-17/>

[R9] Reuters, “Worldcoin must delete all iris scan data, watchdog says” (2024-12-19).

<https://www.reuters.com/markets/currencies/spanish-watchdog-tells-worldcoin-delete-all-iris-scan-data-2024-12-19/>

[R10] Google DeepMind, “About Google DeepMind”.

<https://deepmind.google/about/>

[R11] The Verge, “Google scraps promise not to develop AI weapons” (2025). <https://www.theverge.com/news/606418/google-ai-principles-weapons-surveillance>

[R12]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The fund's value” (average ownership 1.5% of listed companies).

<https://www.nbim.no/en/investments/the-funds-value/>

[R13]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Investments” (portfolio breadth, ownership share).

<https://www.nbim.no/en/investments>

[R14] Washington Post, “Sanders offers corporate governance plan” (2019-10-13).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19/10/13/5565adae-edd8-11e9-8693-f487e46784aa_story.html

[R15] The Next System Project (Democracy Collaborative), “Plans advance for democratizing worker ownership” (2019).

<https://thenextsystem.org/learn/stories/plans-advance-democratizing-worker-ownership>

[R16] Alaska Permanent Fund Corporation (APFC), APFC overview (Permanent Fund purpose and governance). <https://apfc.org/>

[R17] State of Alaska Department of Revenue, “Department of Revenue Announces 2024 Permanent Fund Dividend Amount and Energy Relief” (2024-09-19). <https://dor.alaska.gov/department-of-revenue/news-detail/2024/09/19/department-of-revenue-announces-2024-permanent-fund-dividend-amount-and-energy-relief>

[R18] IRS, “Retirement plans definitions” (ESOP definition; ERISA overview).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plans-definitions>

[R19] U.S. Department of Labor, “What You Should Know About Your Retirement Plan” (ERISA overview).

<https://www.dol.gov/node/63395>

[R20] 이○연, 『공주민제(DCA) 선언』(2025.12.03.) (내부 문서).

[R21] 이○연, 『공주민제라는 이름의 뜻』(2025.12.26.) (내부 문서).

[R22] 이○연, 『한국형 국부펀드·국민성장펀드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 대안(제안)』(2025.12.21.) (내부 문서).

[R23] 이○연, 『마르크스주의의 자기갱신과 반동화의 위험』(2025.12.14.) (내부 문서).